

수 신 각 신문사 정치부 및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이강준 간사 723-5302)
 제 목 전직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의 건
 날 짜 1998. 7. 30. (총 2 쪽)

논 평

‘전직 대통령과의 만찬’ 취소되어야

-후안무치의 전직대통령들, 사죄가 앞서야

1998. 7. 30. (목)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 4명의 전직 대통령들과 청와대 만찬을 갖기로 한 청와대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2. 청와대측은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식 참석에 대한 인사 차원의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국정에 관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논리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정경유착을 통해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로 처벌받은 전·노전대통령과 IMF체제의 직접적 책임자인 김영삼 전대통령과 만나 도대체 어떤 국정의 조언을 얻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을 억압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나라의 경제를 절단낸 사람들로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다. 새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만찬을 가진다면 김대통령에 대한 인식마저 나빠질까 걱정이다.
3. 150만의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지금의 이 국난이 있게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전직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과의 만찬을 생각하기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즉각 실시하여 국난의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고, 실직자들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아니라 전직대통령들도 국민앞에 떳떳이 나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사죄를 먼저 국민앞에 할 것을 권고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